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8월 | 글로벌 반부패 동향

2026 August | vol.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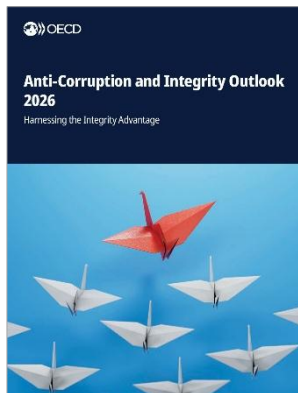
Brief

1	OECD, 각국의 반부패 법·제도 확대에도 규정과 실제 이행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 기반·성과 중심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 제시
2	공공조달의 뇌물·담합·이해충돌 위험에 대응해 공급망 실사, 청렴보증, 행동강령, 반부패 프로그램 등 공급업체 청렴관리 강화 추세
3	(사례) ABB,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아래 제3자 실사·모니터링, 내부 신고·조사, 데이터 기반 점검을 연계한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운영
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 확대와 입찰비리 등 부패 실태조사 강화,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진단·컨설팅 등 하반기 반부패 정책 추진
5	프랑스 반부패청, Sapin II 법상 컴플라이언스 미비에 첫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업과 경영진의 반부패 관리 책임 강화
6	국내 ESG 공시 법제화와 EU 역외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이 추진되며 기업의 ESG·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필요성 확대

목차

1 윤리 체크리스트	글로벌 반부패 정책과 이행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Harnessing the Integrity Advantage (2026)
2 사례 돋보기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강화	ABB
3 윤리, 지금	권익위 동향	신고자 보상 강화...수입회복액 30% 지급 추진
		30 만 국민·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국내외 동향	추석 명절 '민원주의보' 발령
		하반기 입찰비리 등 부패 실태조사 강화
		프랑스 반부패청, Sapin II 위반 첫 직접 과징금 부과
		미국 법무부, 사기 전담부서 개편
		ESG 공시 제도화 본격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U, 역외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공개
4 윤리 네컷	그 비용, 어디에 쓰이나요?	
5 행사		

글로벌 반부패 정책과 이행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Harnessing the Integrity Advantage (2026)

- 각국은 반부패 법률과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규정과 실제 이행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 반부패 정책의 범위가 기업과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조달은 뇌물·담합·이해충돌 위험이 높아 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공급망 실사, 청렴보증, 행동강령, 반부패 프로그램, 청렴교육 및 익명 신고채널 등을 마련하고, 공급업체의 청렴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반부패 정책과 이행

OECD 는 보고서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Harnessing the Integrity Advantage'를 통해 37 개 OECD 회원국과 25 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공공청렴제도의 규정과 이행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부패 전략, 로비, 이해충돌, 정치자금, 공공정보 투명성, 징계 및 사법체계를 살펴보고, 사기 예방, 공공조달의 청렴성, 조직범죄와 부패의 연계 등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과 각국의 대응 현황을 다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반부패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규정과 실제 이행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남아 있다. OECD 회원국들은 공공청렴 분야에서 19%p 의 평균 이행 격차를 보였다. 특히 공직자 징계제도와 이해충돌 관리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행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담당기관의 자원 부족, 감독·데이터 관리의 한계, 정치적 지원 부족, 전문역량 부족 및 디지털 기술의 이점 활용 미흡, 이행 불가능한 공약과 현실의 괴리를 제시한다.

각국의 반부패 정책은 규정과 절차 중심에서 '부패 위험도 기반 접근, 성과 중심, 디지털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범위도 공공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청렴, 공공·민간 협력, 공기업 및 민관협력사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 위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5 년 기준 반부패 전략을 보유한 OECD 회원국 중 67%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은 대규모 거래와 복잡한 절차, 공공·민간의 긴밀한 접촉, 분산된 공급망으로 인해 뇌물, 담합, 이해충돌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분야다. 보고서는 공급업체에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조치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적절히 점검하도록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조달 과정에서 공급업체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조치를 운영한다. 조사대상 40 개국 중 50%는 실사 등을 통해 공급업체가 원재료·부품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자사의 공급망에 존재하는 청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38%는 공급업체에 부패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청렴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없음' 보증을 요구한다. 공식 청렴·반부패 인증을 활용하는 국가는 23%로, 페루는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갖춘 입찰자에게 평가 시 추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종합적인 기업 청렴 프로그램 도입을 촉진하는 국가는 18%, 공급업체 청렴교육을 요구하는 국가는 10%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망과 반부패 업무 간 연계, 청렴기준 및 관련 데이터는 여전히 미흡해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 오른쪽 체크리스트는 보고서가 공공조달 분야에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공급업체의 청렴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공급망 청렴관리 체크리스트>

구분	보고서 핵심 실천 과제	✓
위험관리	입찰 전 규격 편향·비경쟁 절차, 입찰 중 담합·이해충돌, 계약 후 부실 납품·허위청구 등 단계별 위험을 점검하는가?	☐
투명성·실사	공급업체뿐 아니라 주요 원재료·부품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청렴 위험 및 관리 현황을 실사하는가?	☐
행동기준	계약서에 뇌물·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고, 공급업체로부터 청렴 선언이나 '부패행위 없음' 보증을 받는가?	☐
청렴보증	공급업체에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조치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가?	☐
예방체계	공급업체에 청렴기준과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가?	☐
점검·신고	계약 이후 청렴기준 준수, 납품 내용과 청구 내역, 계약변경 등을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후속조치를 하는가?	☐

[출처: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Harnessing the Integrity Advantage (2026)]

참고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Harnessing the Integrity Advantage \(2026\)](#)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강화

사례기업: **ABB**

핵심 키워드: #제3자관리 #데이터기반모니터링 #윤리·준법문화

- (거버넌스) 이사회·경영진의 감독과 성과보상을 연계해 윤리·준법 프로그램의 실행 책임 강화
- (프로세스) 계약 전 실사부터 계약 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 3 자 관리
- (프로그램) 신고·조사 결과와 위반 사례를 내부통제 개선 및 임직원 학습에 활용

ABB,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강화

전사적 반부패 프로그램으로 윤리 · 준법 경영 실천



01 사건 및 조치

- 제3자 업체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고, 일부 지급액을 정상 사업비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
- 2022년 미국 법무부(DOJ) 등 관계 당국과 사건을 종결
- 준법 인력, 내부통제, 제3자 실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합의 금액
3.15억 달러
(약 4,200억 원) 지급

02 The Global ABB Integrity Program

부패 위험의 예방 · 탐지 · 대응을 중심으로 윤리 · 준법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



예방
위험 기반
관리



탐지
모니터링 ·
데이터 분석



대응
조사 · 시정 ·
정제



거버넌스
이사회 ·
경영진 감독

03 ABAC(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Framework 운영

반부패 통제를 사업 전 과정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개선



제3자 실사
ABAC Framework 기반
분류 · 계약 체결 전 실사
및 지속 모니터링



통제 체계
구매 · 판매 · 입찰 · 프로젝트 등
주요 관리영역에 위험 기반
통제 적용



정책 및 절차
선물 · 접대 · 여행, 기부 · 후원,
이해충돌, 장부기록 등 세부
정책과 시스템(Integrity Gateway) 운영



소통과 교육
'Straight Talk' 플랫폼 ·
Business Agenda를 통한
공지 및 교육으로 인식 제고



모니터링과 조사
데이터 점검, 내부감사 ·
임직원 인식조사, 신고 조사 등
을 통해 개선과 재발 방지

ABB는 전기화·자동화·로봇공학을 주력으로 하는 스위스의 다국적기업이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전력회사 에스콤(Eskom) 사업을 수주하며 고위급과 연계된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고, 일부 지급액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패정황이 드러나자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ABB는 2022년 미국 법무부 등 관계 당국과 사건을 종결하면서 준법 인력을 확충하고 내부통제와 제3자 관리 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구받았다.

현재 ABB는 전 세계 사업장의 윤리·준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The Global ABB Integrity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아래 부패 위험의 예방·탐지·대응, 제3자 관리, 내부 신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점검을 통합한다. 운영 결과는 분기별로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며, 윤리·투명성 목표의 달성 여부를 고위경영진의 성과보상에도 반영한다.

ABB의 부패 방지체계인 ABAC(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Framework는 실제 업무에 반부패 관리를 적용한다. 주요 관리영역은 제3자 거래, 선물·접대·여행, 기부·후원, 이해충돌, 장부기록, 인수합병 및 입찰·프로젝트이며, 사업부문과 국가별 위험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제3자는 계약 전 실사부터 거래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한다. 제3자에 대해 실제 소유자나 해당 업체의 전문성·평판, 공직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반부패 의무와 감사권, 위반 시 계약해지권을 반영한다. 계약 후에도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지급금액의 적정성, 새로운 위험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선물·접대·여행·기부·후원 및 이해충돌은 웹 기반 시스템인 Integrity Gateway를 통해 신고하고 사전승인을 받는다. 승인 내용과 후속 조치를 기록해 개별 거래를 관리하고, 국가·사업부·거래유형별로 반복되는 위험을 파악한다.

ABB는 내부 사례 공유·학습 플랫폼 'Straight Talk'를 통해 윤리·준법 위반 사례와 외부 사례, 주요 지표 및 개선사항을 임직원에게 공유한다. 또한 분기별 윤리준법 논의 프로그램인 'Integrity on the Business Agenda'를 통해 관리자가 제3자 위험, 이해충돌, 부적절한 비용처리 등 주요 문제를 직원들과 직접 논의한다.

ABB는 윤리·준법 위반 신고채널 'Business Ethics Helpline'을 24시간 운영한다. 신고는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조사하며, 위반 원인을 분석해 내부통제와 업무절차 개선에 반영한다. 운영 성과는 신고·조사 동향, 교육 참여율, 내부감사 및 임직원 인식조사 등의 데이터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예방·탐지·조사·개선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ABB의 제3자 부패위험관리>

ABB의 제3자 위험 관리

절차 및 통제

제3자 도입 및 거래 전 과정 모니터링



위험 기반 사전실사

거래관계를 검토하기 전
위험에 따른 사전실사 실시



체계적인 선정·승인

제3자 선정과 계약에
체계적인 내부 승인절차 적용



표준계약서 적용

부패 방지 조항·감사권·계약해지권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사용



거래관계 전 과정 점검

거래관계 전 기간에 걸쳐
위험 수준에 맞게 모니터링

제3자의 선정부터 계약 이후까지 이어지는 통합 관리체계

[출처: ABB, The Global ABB Integrity Program 2024]

참고

[ABB, The Global ABB Integrity Program 2024](#)

[ABB, Code of Conduct](#)

[DOJ, ABB Agrees to Pay Over \\$315 Million to Resolve Coordinated Global Foreign Bribery Case](#)

[SEC, ABB Settles SEC Charges That It Engaged in Bribery Scheme in South Africa\(2022\)](#)

권익위 동향

권익위 활동

신고자 보상 강화...수입회복액 30%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비율을 수입회복액의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유인을 높이고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적극적인 적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7월 14일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5101

30만 국민·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0만 명의 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과 부패 경험 등을 측정해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공직자의 인식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감점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수준 개선에 활용하고, 올해 12월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8월 3일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6269

권익위 정책

공공재정 부정수급 1,296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2025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4만 1,781건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했으며, 부정수급 신고와 기관별 점검 활동 강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요 사례로는 농업직불금, 한부모가족지원금, 유가보조금, 국가근로장학금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인 처분과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8월 7일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6461

하반기 입찰비리 등 부패 실태조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 정책 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입찰비리와 수당 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개선하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공개와 부정청탁 제재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을 수입회복액의 30%까지 확대하고 30억 원의 보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분야에서는 공기업·민간기업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수준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청렴윤리경영 진단의 본격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7월 16일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5295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ESG

프랑스 반부패청, Sapin II 위반 첫 직접 과징금 부과

프랑스 반부패청(AFA) 제재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Sapin II 법(투명성·부패방지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과 경영진에게 각각 35만 유로(약 5억 7천만 원)와 6만 유로(약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FA가 사전 시정명령 없이 컴플라이언스 미비를 이유로 직접 금전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다. 해당 기업은 부패위험 평가, 제 3자 실사, 회계통제, 위험 기반 교육, 내부통제·평가체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위원회는 부패위험 평가가 반부패 프로그램의 핵심 기반이며, 점검 이후 개선하더라도 기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영진에게도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해 기업의 지속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 미국 로펌 Mayer brown 홈페이지 2026년 8월 4일
<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articles/2026/08/04/anti-corruption-enforcement-in-france>

미국 법무부, 사기 전담부서 개편

미국 법무부(DOJ)는 기존 형사국 산하 '사기부(Fraud Section)'를 '화이트칼라·기업범죄 집행부(White Collar and Corporate Enforcement Section)'로 개편했다. 새 조직은 내부자거래와 증권사기 등 민간 부문의 금융범죄와 기업범죄 수사에 중점을 두며, 별도로 신설된 국가사기집행국(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은 공적 급여·정부 재정과 관련한 사기 범죄를 담당한다. 기존 해외부패방지법(FCPA) 전담팀도 새 조직에 남아 해외 뇌물 사건을 계속 수사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FCPA 집행 범위는 축소된 상태다. DOJ는 이와 함께 사이버 사기, 폰지사기, 기업범죄,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부패·외국의 강요행위 등을 주요 집행 분야로 제시했다.

- Bloomberg Law 2026년 8월 11일
<https://www.bloomberglaw.com/en/webinars/fraud-enforcement-white-collar-and-corporate-enforcement>

ESG 공시 제도화 본격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 ESG 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자산 10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 3자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 시행 초기 3년간은 고의적 허위공시 등을 제외하고 행정·민사·형사책임을 면제하며, 추정·예측정보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증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이나 허위 인증 등에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매일경제 2026년 8월 5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17034?from=kakao>

EU, 역외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공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EU에서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역외 기업그룹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ESRS-40a'를 공개하고 10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최근 2개 회계연도 EU 내 순매출이 각각 4억 5,000만 유로(약 7,300억 원)를 초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EU 자회사나 지점을 둔 비 EU 기업그룹이다. 공시 범위는 기후 분야의 경우 글로벌 기준으로, 인권·환경 분야는 EU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EFRAG은 의견 수렴과 현장 실증 등을 거쳐 2027년 1월 EU 집행위원회에 최종 기술 자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 임팩트온 2026년 7월 28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48>

그 비용, 어디에 쓰이나요?

윤리네컷



2026년 3분기 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민간기업 윤리경영(윤리·준법경영, 감사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컴플라이언스 운영 전략 및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문화 특강.

-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일정: 2026년 9월 18일(금)
- 신청기간: ~ 2026년 9월 4일(금)
- 장소: 중소기업DMC타워 3층 대회의실(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 참고:
<https://edu.acrc.go.kr/0401/board/notice.do?mode=V&pageIdx=1&idx=4983455792877895776&>

제33회 기업혁신대상 공고

경영혁신 및 ESG경영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여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AI·첨단기술 융합 및 ESG 가치 창출 등 혁신 성과의 산업계 확산을 도모하는 시상 공모.

- 주최: 산업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
- 응모기간: ~ 9월 23일(수)
- 참고: <https://sople.me/edu-event-net/313420?type=conference>

독자 퀴즈

※이번 달부터 기존 독자 의견 조사는 '윤리경영 퀴즈'로 대체됩니다.
독자의견은 이메일/퀴즈 응모 폼의 의견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Q. 해외 사업 시 부패 위험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 ① 현지 날씨
- ② 거래 상대방과 자금의 사용 목적
- ③ 직원의 출퇴근 시간
- ④ 사무실 인테리어

응모하기 <https://quiz.assist.ac.kr>

2026년 9월 7일(월)까지

(1)'응모하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기프트콘 당첨자 안내

박○수님, 신○순님, 박○우님, 최○빈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응답

★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세요 ★

윤리경영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